

【서평】

‘한반도 통일’, 축복인가 재앙인가?

허구와 실제 사이에서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스무살 독일 얼마만큼 컸나?』 (서울: 한울, 2010).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서울: 민음사, 2009).

우베 뮐러 저, 이봉기 역, 『대재앙 통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서울: 문학세계사, 2006).

강동완(통일연구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흡수통일 이후 5년, 2016년 서울, 이곳은 지옥이다”

I. 서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목 놓아 부르던 때가 있었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고, 굳이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통일은 그 자체로 지고지순한 가치였다. 통일된 민족과 조국이 결코 꿈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곧 이루어질 현재이며 미래였다.

하지만 분단상황이 지속될수록 이러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점

차 상실되었고 통일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왜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는지, 오히려 통일이 되면 우리네 삶이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더욱이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 등 소위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민족이라는 통합논리는 설득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민족끼리’를 외쳤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한반도 분단의 비극은 정치·군사적 대립과 북한 핵문제로 인해 불안정한 평화만이 지속될 뿐이었다.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환한 웃음으로 부둥켜안고 두 손을 꼭 맞잡았지만, 분단 60년 동안 지속된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교류와 협력, 대결과 갈등을 교차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며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평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관심사로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과 함께 통일세 논의를 제안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 하여 남북한 평화-경제-민족공동체의 3단계 남북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실현을 위한 논의의 폭을 확장하였다.

통일의 주체적 행위자라 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미래를 준비하자는 통일세 제안은 다소 현실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각계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최소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고려할 때 남한이 경제적 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정도의 논의는 일면 발전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통일세, 통일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희망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의 재앙이 될 것인가.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사회·문화적 인식 차이와 더불어 수십 배의 경제적 격차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반도와 달리 동·서독은 분단 40년의 아픈 역사를 끝내고 통일을 이룩한 지 이제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남북한과 같이 분단이라는 동일한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독일로 살아온 지 20년. 독일에게 통일은 과연 축복이 되었을까, 아니면 재앙이 되었을까. 한쪽은 아직 통일의 길을 걸어보지 않았고, 한쪽은 선구자처럼 통일의 길을 20년 동안 내달렸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독일의 사례에서, 그리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가상현실에서 통일한국의 모습과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허구를 바탕으로 한 ‘가상의 미래’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실제 현실’이라는 상이한 두 개의 차원을 비교하면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가상의 미래는 이응준의 소설 『국가의 사생활』을 통해, 실제 현실세계의 모습은 김동명의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스무살 독일 얼마만큼 컸나?』를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의 통일 준비를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베 뮐러의 『대재앙 통일: 통일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주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은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을 그리고 있는데, 2011년 5월 9일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한다는 가정에서 소설은 시작된다. 통일 후 5년이 지난 시점. 통일한국의 모습은 결코 행복한 장밋빛 미래가 아닌 극도의 혼란에 빠진 모습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재앙으

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동명의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스무 살 독일 얼마만큼 컸나?』는 독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고 시작한다. 45년 만에 이룬 독일 통일, 그 후로 20년이 지나 이제 사람으로 치면 스무 살에 해당하는 독일이 얼마만큼 자랐고 그동안 어떤 성장통과 사춘기를 겪으며 오늘까지 성장해 왔는가를 그려보고 있다. 즉, 독일이 통일된 후 지난 20년간 상이한 정치·경제·국방·사회체제를 어떻게 통합했고, 무엇보다 동·서독 주민들이 어떻게 통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우베 뮐러의 『대재앙 통일: 통일로부터의 교훈』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경제적 부문의 현황과 전망을 담고 있다. 독일 통일 그 자체가 대재앙이 아니라 통일 이후 문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을 대재앙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II. 가상 현실에서 본 통일한국의 모습: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이응준이 그리고 있는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은 어떠할까. 통일은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최소한 통일된 지 5년 후의 서울의 모습은 지옥으로 표현될 만큼 혼란스러운 재앙으로 그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남한주민들에게는 북한 재건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세상에 직면하여 적응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된다.

통일된 2016년의 서울은 양심을 잃은 부패 경찰의 횡포, 관리되지 않은 무기의 총기사고, 이북 출신 폭력 조직의 난립, 유흥업소 종사자로 전락한 북한출신 여성들, 주민등록조차 되지 않은 대포 인간을 악용한 각종 범죄, 신종 마약의 유통, 급식소에 줄을 선 통일 빈민의 증가 등으로

너무도 혼란스러운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통일 대한민국에서 총기는 도난차량보다도 구하기가 쉬웠다. 모두에게 청천벽력 같았던 평화통일의 대혼란 속에서 공화국 군대의 무기 회수와 그 관리가 허술했던 탓이다. 그리고 그것은 2011년 5월 9일 오후 4시경 한반도에서 난데없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며 튀어나온 수천의 마귀들 중 고작 한 마리에 불과했다고 표현한다.¹⁾

판도라의 상자에서 튀어 나온 수천의 마귀들로 표현되는 통일한국의 혼란스러운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한국의 행정정보체계가 아무리 디지털화·정보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북한주민들 앞에서는 쓸모없는 기계에 불과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개인의 신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소위 대포인간을 양산하게 되었다.

통일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전부를 주민등록화하는 데에 실패했다. 북한은 통일 당시 이미 국가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난민들 투성이었고, 관공서 방화가 비일비재해 아날로그가 정보 시스템의 대부분이던 처지에 공문서들이 대량으로 소실되었다. 근대적 기록이 부재한 국민들, 이른바 대포 인간들이 그들이었다. 주민번호도 없고 사진도 없고 지문도 없다.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대포인간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허깨비들이었다.²⁾

또한 북한주민들의 통일 이전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직업경험, 자격증은 모두 남한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졌고, 무엇보다 2등국민으로 전락한 북한주민들의 자존감 상실은 사회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1)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p. 23.

2) 위의 책, p. 104.

과거 북한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들의 경력은 통일 조국에서 휴지 조각으로 변해 버렸다. 가령, 북한의 교사들은 거의 전부 교단에서 퇴출당했다. 오히려 이북 학생들이 훨씬 강력하게 북한 출신 교사들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³⁾ 북한 주민들의 자격증이나 경력 인정 문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미 그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통일한국의 암울한 미래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문제로서 북한 주민들이 갖는 인식체계의 문제이다.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체계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아래에서 외부정보의 접촉이 차단된 채, 북한 당국의 선전과 선동에 의해 개조된 사회주의 인간형, 더 나아가 김일성·김정일을 교주로 하는 수령교 인간형으로 의식체계가 개조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인식체계는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지배했다.

이미지들과 상징체계들에 지배당하던 사람들은 그것들이 사기라고 판명이 난다 한들 이전과 동일한 신호가 오면 어쨌든 반응한다. 조건반사는 개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조건반사는 인간의 영혼으로 들어오면 스스로 확장하고 심오해진다. 아직도 김 주석의 초상화라든가 김일성화 같은 것들 앞에 노출되면 머뭇머뭇하기 일쑤였다. 세뇌된 순종을 쉽사리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인공은 통일 이후에도 7월 8일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우울했다. 모태 신앙은 잘 지워지지 않았다.⁵⁾ 북한 주민들에게 체득된 주체사상과 인간형의 개조는 남북한 통합 시기에든 여전히 한 인간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3) 위의 책, p. 27.

4) 1994년 7월 8일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날을 의미함.

5) 이웅준, 『국가의 사생활』, p. 121.

북한은 수령교라는 종교국가로 개념화 할 수 있으며 당과 인민의 종교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⁶⁾ 이용준은 북한 주민들의 주체사상에 의한 수령교를 ‘모테신앙’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은 인간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종교적 신념체제로 굳어져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부적응과 정체성의 문제로 남한 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장한 인격이 갑작스러운 체제 붕괴로 인해 시장경제의 냉혹한 현실에 내몰렸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기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같은 거대 조직이 조장하는 권위주의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표현 방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다. 삶에서 자아가 소외되는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완전한 자유란 곧 공포⁷⁾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의 삶을 사는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오히려 또 다른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이중적 행위를 보이며 이러한 충돌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사회주의형 인간은 전체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거나 남과 스스로를 비교하고 더 나아가 인정과 애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사태가 좀 심각해지는데, 불안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유사 집단을 형성해 타인을 까닭 없이 공격하는 반응을 나타낸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 있긴 하지만 이북 사람들은 실업의 탓을 엉뚱한 데로 돌렸다. 얼마 전까지 공산주의자들이었던 이북 사람들이 버젓이 극우파가 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

6) 북한의 수령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동완·김병욱, “북한주민들의 수령교 의식변화에 따른 북한선교 방안,” 『복음과 선교』, 제11집 (2010) 참조.

7) 이용준, 『국가의 사생활』, p. 98.

하고 해치는 웃지 못 할 사건들이 벌어졌다.⁸⁾

마지막으로 과거사 청산 문제로서 통일 이전 북한 당국의 정치적 활동을 도우며 생활했던 간부들이나 정치적 인사들에 대한 주민들의 보복에 따른 사건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즉, 통일 이후 복수를 하기 위해 북조선의 비밀 경찰이나 수용소 관리인들을 추적하는 부류가 더러 있었다. 또 자기만 버려놓고 탈북한 가족을 찾아내서 죽여 버리겠다고 버르는 사람들도 있었다.⁹⁾

Ⅲ. 실제 현실에서의 통일에 대한 평가: 독일통일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응준이 가상현실의 허구를 통해 그려내고 있는 한반도 통일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이질화에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동·서독의 경우 정말 통일의 미래가 이처럼 암울한 재앙으로 다가왔을까를 생각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명은 독일 통일을 21세기 독일 역사 중 가장 축복 받을 만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한다. 또한 통일된 독일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중 하나고, 유럽통합을 주도하며 세계의 여론을 이끌어나가는 품격 있는 국가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통일 초기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다소 발생하지만 이는 상이한 양 체제가 통합될 때 파생되는 문제점과 후유증이지,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동독지역은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간과

8) 위의 책, p. 99.

9) 위의 책, p. 226.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¹⁰⁾

많은 도시의 주택들이 개선되었고, 통일 전 주택난은 모두 해소되었다. 구시대의 잔재인 환경오염이 제거되었고 생태계가 고려된 경제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동독 지역의 우라늄 광산과 갈탄 탄광에 대한 환경정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교육은 서독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누구에게나 적성·능력·성과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진다. 동독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보유율은 거의 서독과 같은 수준이 되었고 주민들의 문화생활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¹¹⁾

그런데 김동명 역시 독일 통일과정 초기에는 각기 상이한 체제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1990년 6월 서독 주민의 85%는 굳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서독 체제 자체에 만족하고 있었고, 이 중 1/2은 통일 과정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서독의 기존 정치 질서가 변화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서독 주민들의 경우 통일 초기에 58% 정도가 통일을 기쁜 일로 여겼고, 1990년대 중반에는 41%로 하락했다. 서독 주민들은 동독재건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직접 체험했다.¹²⁾ 특히, 통일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동독 주민의 2/3는 통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인식했다. 동독 주민들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실업’, ‘기회균등 상실’, ‘2등 국민’, ‘국가재정악화 및 세금 인상’ 등의 부정적인 현상들을 연상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동독 주민들은 이미 ‘불안, 분노, 절망, 시기’ 등을 체험했

10)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스무살 독일 얼마만큼 컸나?』, p. 433.

11) 위의 책, p. 434.

12) 위의 책, p. 438.

고, 동독 주민들의 78%가 앞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2등 시민으로 살아갈 운명임을 직감했다고 조사되었다.¹³⁾

또한 지난 20년간 사회문화적 통합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양독 주민 간에는 이질감과 불균형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서독 간 사회통합 차원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정의(materielle Gerechtigkeit)와 관련된 문제이다. 동독 주민들은 과거 그들의 경력과 자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고, 임금과 연금에서도 서독 주민들과 불균형을 이룬다고 느끼고 있다. 지도상에서의 국경은 사라졌으나, 독일 국민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두 개의 국가가 장벽(Mauer in den Kopfen)으로 분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독 주민 중 일부는 전제주의적 강요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서독의 경제력과 정치적 수단에 의해 점령당하거나 식민지가 되었다고 인식하는 실정이다.¹⁴⁾

하지만 이처럼 통일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서독 주민들의 90% 이상이 장벽 개방과 통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 국민들이 통일로 인한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먼저 자유를 향유하는 가운데 개인적·직업적·가정적 측면에서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산가족의 분단을 종식시켰다는 점 등이다. 동·서독 주민들 2/3는 지난 20년간 통일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¹⁵⁾

한편, 우베 뮐러 역시 독일 통일을 축복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베 뮐러는 독일 통일 그 자체를 대재앙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마치 책 제목만 봐서는 표면적으로 독일 통일이 재앙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핵심적인

13) 위의 책, p. 439.

14) 위의 책, p. 446.

15) 위의 책, p. 440.

주장은 통일 이후 통합문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을 대재앙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독일인의 다수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통일에 대해 대단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통일은 사회적·문화적 그리고 인간적 관점에서 동서독 모두에게 축복인 것은 확실하다. 단,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¹⁶⁾

IV. 독일통일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 통일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베 뮐러는 독일 통일 그 자체는 대재앙이 아니지만, 경제적 문제에서만큼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통합정책, 특히 지금의 동독재건정책이 지속될 경우 독일통일이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우베 뮐러는 구동독지역 재건과정에서의 실패는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지만, 인구변동처럼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은 없다고 한다. 내란이 일어난 발칸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 15년 동안 주민 감소가, 비교 가능한 유럽의 모든 지역에서 구동독지역에서처럼 현저하게 나타난 곳은 없다.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젊고 이동 가능하며 진취적인 동독 주민이라는 것이다.¹⁷⁾ 많은 자금을 퍼붓기만 하는 정책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만들었고, 결국 실패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책의 실패는 지금도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전체 독일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¹⁸⁾

16) 우베 뮐러, 『대재앙 통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p. 14.

17) 위의 책, p. 19.

18) 위의 책, p. 268.

잃어버린 시간은 15년이면 충분하다. 이 시간은 구동독지역 재건을 구서독지역의 증축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만약 지금의 방식으로 앞으로 15년이 지나간다면, 전체 독일은 파산할 것이다. 계속하여 구동독지역을 구서독지역의 부속물로 생각한다면, 구동독지역은 80년대의 동독과 비슷한 참담한 좌절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구동독지역의 비참한 상황은 점차 구서독지역을 덮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구동독지역 재건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¹⁹⁾

우베 뮐러는 동독지역의 새로운 재건사업이 출발점에 서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지금과 같은 연대협약은 실패한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수십억 유로를 개발지역에 쏟아 붓는 식이 아닌 좀 더 현명한 방식의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동독지역에 필요한 것은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경쟁력 우위의 확보라는 주장이다.

우베 뮐러의 이 같은 주장은 향후 남북한 통일 시 북한 지역 재건을 위한 정책이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원인 중의 하나는 더 나은 일자리와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경이 개방되고 이동이 제한이 없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남한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동에 대한 문화적 장애는 단순한 수준에서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남한으로의 대규모 이동의 문제를 의미한다. 보다 장기적인 면에서, 지난 10년간 남한으로의 입국한 2만 명의 북한이탈주민조차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문화적

19) 위의 책, p. 283.

차이는 공통의 역사를 가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이동을 단념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차라리 북한 주민들의 불만(남한에서의 차별에 의한)과 남한 주민들의 불만(새로운 북한 주민들과의 경쟁에 의한)의 폭발적인 혼합을 이끌 것이다.²⁰⁾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과 이에 따른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 지역 재건과 이를 통한 정착유인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이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대이주 결과로 나타난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채산성의 문제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이 축소되어 도시는 점차 단절되며, 노동력의 상실은 결국 동서독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다.

이는 곧 한반도 통일 시 북한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동독의 사례와 같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인위적인 건설붐이 아니라 지원된 재정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와 행정체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지역 주민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개발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V. 한반도 통일의 방식: 독일과 같이 흡수통일 할 것인가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 내부의 갑작스러운 상

²⁰⁾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과 한국에서의 통일 재원마련: 통일세는 필요한가?,”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법무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한스 자이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0년 10월 4일), p. 52.

황변화에 대비하는 정책대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 나아가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시 이를 한반도 통일의 기회요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김동명은 한반도 통일이 조만간 독일의 패틴대로 흡수통일로 귀결될 것이라는 가정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동독과 북한을 비교해 볼 때 거의 오류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이는 첫째, 북한과 동독 사회의 정치문화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동독의 와해는 동독 주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평화혁명에 기인했다고 보지만 북한 주민들은 동독 주민들과 같은 민주화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북한에는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워 줄 동독의 반체제 단체나 교회와 같은 종교 세력이 없고, 또한 동구권 내 인권문제나 자유화를 촉진시켰던 CSCE와 같은 국제단체로부터의 압력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둘째, 과거 동독 지도부는 서방의 지도자와 비교할 때 이념만 달랐지 사고나 행동 수준이 국제 수준에서 통용되는 일반 상식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북한 지도주의 사고의식이나 행동패턴은 동독의 지도부와 비교할 때 훨씬 비이성적이라는 것이다.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획일화된 북한 사회의 핵심 기관들인 노동당, 북한 정부 및 최고인민회의가 모두 와해되어 남한에 백기 투항하며 무조건 남한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본다.

셋째, 동독 인민군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대로 성장, 관리되어왔기 때문에 국내 치안을 위해 투입된 적은 거의 없었고, 통일 직전 변혁기와 같은 위기 상황을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반해 북한 인민군은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기관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 만약 북한에서 1989년 가을 동독에서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경우 이는 같은 해 중국의 천안문사태(6·4)에서처럼 북한 인민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넷째, 김정일 정권이 몰락하더라도 그 후속 체제로 여전히 공산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평가한다. 즉, 북한 내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설사 그 정권이 붕괴된다할지라도 국가로서의 북한은 여전히 존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 사태에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분단 직후부터 서독의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동독의 ‘체제교체(Systemwechsel)’를 염두에 두고 대 동독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체제교체라는 동독의 공산주의와 계획경제체제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오로지 꾸준한 접촉과 교류협력을 통해 분단으로 야기되는 양 체제간의 이질성을 막는데 주력했고, 접촉을 통한 변화와 작은 걸음 정책으로 동독의 체제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였다. 서독이 동독의 체제변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접촉과 교류협력을 추진한 기간은 길게는 40년 짧게는 20여 년에 달했던 반면 동독 내 체제교체와 체제붕괴까지 이어지는 데는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 중단 없이 이어져온 동서독 간의 접촉과 교류협력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오로지 1989~199년 기간 중 발생한 정치적 대변혁에만 초점을 맞추어 동독이 무너진 것처럼 북한도 곧 무너져 한반도에 조만간 흡수통일이 도래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²¹⁾ 그러면서 독일의 흡수통일이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꾸준한 접촉과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대북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한편, 북한에 정치적 대변혁이 발생하여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

21)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스무살 독일 얼마만큼 컸나?』, pp. 493~495.

경우로는 크게 두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 동독과 같은 경우로,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개혁·개방요구에 굴복하여 자발적으로 남한에 흡수당하길 원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인민군을 포함한 북한 권력집단의 이해와 동떨어진 것으로 당분간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일 것이다.

둘째, 남한 정부가 북한의 내부적 붕괴를 틈타 군사적 제압을 위해 북침을 하는 경우이든지, 아니면 북한 지도부가 내부적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돌파할 목적으로 남침 공격을 자행하고 남한이 이를 격퇴하여 한반도를 평정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에 제2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한 모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전제를 볼 때 이제까지 흡수통일을 가정하여 세운 모든 대북정책의 기획물들은 실현성 여부에 의문을 갖고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²²⁾

결국 김동명의 주장은 독일의 흡수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기보다 꾸준한 접촉과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의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격차를 줄여가며 점진적·단계적인 통일을 준비하자는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단계적 준비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점진적 통일논의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북한 정권의 탄압과 폭정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의 문제이다. 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북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22) 위의 책, p. 496.

의 정치적 신뢰는 물론, 국제사회의 개발자금 투입을 위한 북한의 개혁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같은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촉구를, 북한주민들에게는 외부 정보의 확산을 통해 정치적 대변혁의 시기에 북한정권의 부당성을 표출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강화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갑작스러운 한반도 정세변화를 통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준비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기웅은 독일 통일의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으로 인한 교훈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통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 한반도에 도래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을 먼저 이룩하는 것이 민족적 사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신속한 통일의 선택에 따른 어려움은 후세를 위해 당연히 져야 할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

Ⅵ. 통일한국을 위한 우리의 준비: 통일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베 뮐러는 독일통일은 마치 마른하늘의 날벼락처럼 서독 주민에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라고 말한다. 서독은 동독이 붕괴되기 오래 전에 이미 통일을 연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독 정부는 통일이 야기되는 다양한 측면을 연구할 수 있는 기

23) 손기웅, 『독일 통일 쟁점과 과제』 (서울: 늘품플러스, 2009), p. 299.

회가 있었다. 따라서 통일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때, 어떤 장기적 손실과 위험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아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했다²⁴⁾고 말한다. 독일 통일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서독은 동독이 붕괴되기 오래 전에 이미 통일을 연습할 수 있었고, 단계적 통일에 따른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한 준비 속에서도 어느 순간 찾아온 통일을 맞이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독일통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만들어가는 우리에게도 독일의 경험을 교훈삼아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독일통일 20년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은 제도적 통합뿐만 아니라 내적 통합이 완성될 때 비로소 완전한 통일이 이룩된다는 사실이다. 하베 뮐러는 현재 독일 정부 입장에서 내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동독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동독 주민들에게 확실한 일자리를 보장하며 실업률 격차를 줄이고 그들의 내면세계를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즉, 동·서독 간 임금이나 연금 등에서 실질적 차이 등이 해결될 때 동독 주민들의 2등 국민이라는 감정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²⁵⁾ 여전히 진행형인 독일의 내적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일자리 창출과 동서독 주민 간의 임금격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적 사안 중 하나는 취업문제로 귀결된다.

‘먼저 온 미래’²⁶⁾로 불리어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정착과정에서

24) 우베 뮐러, 『대재앙 통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p. 89.

25)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스무살 독일 얼마만큼 컸나?』, p. 448.

26) 마크 지맥 외, 『북한이탈주민 리포트: 먼저 온 미래』 (서울: 늘봄플러스, 2009).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역시 취업 문제임을 감안하면 향후 남북한 통합 시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통합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는 그들의 경제적 자립정착이라는 의미 외에도 남한 사회에서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분단이라는 공간적·시간적 경계의 형성은 북한이탈주민의 과거 인적자원 형성의 몰인지 내지 무의미를 양산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경제적 해석과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분단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²⁷⁾

한편, 동서독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동서독 주민간 교류를 통해 외부정보 유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때 지속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명은 폐쇄 사회인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뼈라를 포함하여 DVD, USB, 라디오 방송 및 휴대전화 등 정보매체가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속적인 대북 압박이 당장의 체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지라도 북한의 체제 변화를 초래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⁸⁾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남한 영화나 드라마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의 정보통제에서 벗어나 외부세계의 문화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되고 있다. 북한 당국의 통제와 이완 사이에서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잦아지고 북한 내부의 시장이 확산됨으로 인해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27) 박정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활성화 방안과 제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정책 및 발전방안 모색』, 열매나눔재단 사회적기업센터·국회인권포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공동주최 심포지엄 자료집 (2010년 10월 21일), p. 91.

28) 위의 책, p. 622.

남한 영상매체의 접촉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과 환상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며, 이는 곧 개인의 의식변화는 물론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²⁹⁾

따라서 북한 주민들과 정권을 구분하여,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외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여 의식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혁·개방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VII. 결론

한반도 통일과 통합을 주제로 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속보가 급박하게 전해진다. 한반도 통일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에는 지금의 남북관계가 너무나 암울한 현실인가. 군사적 긴장과 충돌, 확전에 대한 우려, 핵무기의 위협 등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기에 더더욱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독일 통일이 20년을 맞으며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통일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통일된 독일은 최소한 군사적 충돌에 의한 비극적 현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정 남북한 통일을 진지하게 이야기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다시 한번 남북한 주민들 모두의 마음속에 간절한 염원으로 메아리 쳐지기를

29)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은?』, 현대북한연구회 창립1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0년 8월 24일) 참조.

소망해본다.

이응준은 이렇게 말한다. “환란은 때로 필요하다.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변화해 치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소설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포함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를 희망한다.”

통일이 북한에 대한 남한 문화의 이식이 아님은 분명하며, 북한이 남한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응준의 말대로 변화의 과정을 통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통일이라는 변화를 통해 남북한 모두가 치유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긴 원래 이랬어.”라는 소설 속 주인공의 말은 현재 남한의 모습 역시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정 남북한 모두의 변화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너나들이(서로 너, 나 하면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일컫는 순우리말)로 살아갈 날을 간절히 기대한다. ‘다시 통일을 맞이한다면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³⁰⁾라는 독일통일의 교훈을 되새기며, ‘통일을 맞이하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두의 각오를 다잡을 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우러짐의 통일을 꿈꾸며...

30) 쿠르트 비덴코프 (Kurt Biedenkopf, 작센 주 전 주지사).

강동완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류, 북한을 흔들다』(공저, 근간),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공저),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남남갈등을 넘어 남북상생으로』 등이 있다.